Xmonster

공직자 업무 보조 AI 에이전트 3

10개 분야 실무 특화 AI 에이전트 소개

법령은 AI가 찾고, 판단은 사람이 한다



공개 일자: 2026. 10. 26 총괄기획: 최규호 본부장 대표이사: 강명수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스캐터엑스

한 장으로 보는 엑스몬스터 업무 지원AI 에이전트 3

🎯 왜 만들었나

법령 검색·절차 확인·문서 초안 작성에 하루 수 시간을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누락으로 처분이 | 취소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무엇을 하나

10개 업무 분야별 AI 에이전트가 실시간 법령 조회 → 절차 하자 탐지 → 문서 초안 작성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 어떻게 다른가

답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불확실하면 확인 경로를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 공직자가 합니다.

10개 분야 · 3단 구성 설명 · 실명 사례 10건 · 법령 실시간 조회

※ 이 에이전트들은 검토·초안 지원 도구입니다. 처분·인허가·집행의 최종 결정은 담당 공직자가 합니다.

10개 에이전트 — 분야별 구성

카테고리 ① — 도시·주거 정비	
① 빈집 정비 지원관	철거 전 법령 구분 + 절차 하자 탐지
② 재개발 나침반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점검
카테고리 ② — 환경·안전 행정	
③ 환경 민원 판정관	소음·악취·분진 발생원 분류 + 처분 검토
④ 폐기물 책임 분류관	폐기물 종류·처리 책임 판정
⑤ 대기·수질 처분 판정관	측정 유효성 + 위반 차수 검토
카테고리 ③ — 시설·공간 관리	
⑥ 공원 허가 가이드	공원 법적 지위·허가 경로 구분
⑦ 교통 관할 구분	경찰·지자체·도로관리청 관할 분리
⑧ 주차 행정 가이드	설치대수 산식 계산 + 조례 조회
⑨ 시설 안전 점검	점검 의무 매트릭스 + 누락 탐지
카테고리 ④ — 민생·경제 지원	
⑩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	공고 실시간 탐색 + 중복 판정



Category 01

도시·주거 정비

❶ 빈집 정비 지원관 · ❷ 재개발 나침반

빈집과 정비사업, 절차 하자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빈집 정비 지원관 — 철거 전에 법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법령 자동 구분
도시·농어촌 빈집,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절차 하자 사전점검
명령 전에 빠진 단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서 초안 작성
조치명령서·계고서·민원회신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빈집이라도 절차가 틀리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전라남도 고흥군 건축주택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efore

소유자가 3년째 연락이 안 돼요.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그냥 철거하면 안 되나요?
계고서 한 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빈집 정비 지원관에게
상황 입력

After

❶ 적용 법률 구분

고흥군 읍·면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적용
(빈집특례법 아님)

❷ 3대 절차 하자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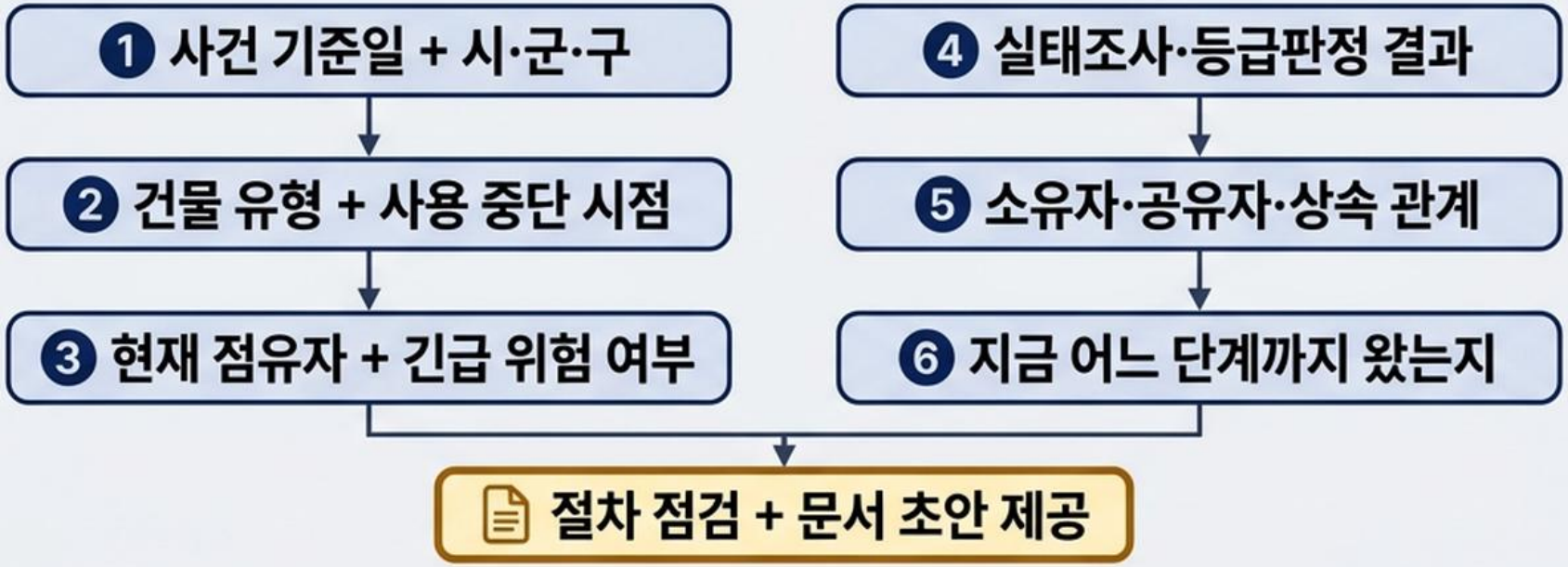
조치명령 없는 계고 → 처분 취소 위험
⚠️ 공시송달 전 주소조사 누락 확인 필요

❸ 다음 단계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 → 조치명령 → 60일
이행기한 → 불이행 확인 → 대집행 순서 안내

※ 실제 집행 전 처분권자와 법무부서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효과: 처분 취소 위험 사전 차단

설명: 시정명령 누락·공시송달 남용 등 3대 하자를 미리 잡습니다.

효과: 검토 시간 단축

설명: 법령 찾고 판례 확인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 드립니다.

효과: 문서 품질 향상

설명: 조치명령서·계고서 초안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제공합니다.

⚠ 이 에이전트는 검토와 초안을 지원합니다. 실제 철거·대집행 결정은 반드시 담당자가 확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나침반 —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단계별 절차 점검
조합설립부터 이주·철거까지
빠진 단계를 확인합니다

개정법 즉시 반영
동의율·재건축진단 등 최신 변경사항을
검색해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별 권리 분리
조합원·세입자·영업자·청산대상자
각각의 권리를 구분합니다

"인가가 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 다음 단계 하자도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efore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으니까 이제 세입자들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은 조합이 알아서 한다는데, 저희가 뭘 더 확인해야 하나요?'

💬 재개발 나침반에게 상황 입력

After

① 즉시 퇴거 불가 경보

관리처분인가 ≠ 즉시 강제퇴거 가능 ⚠️
보상금 지급·공탁 완료 여부 먼저 확인 필요

② 세입자 권리 목록

주거이전비·이사비·임시거주시설 지원 여부
조합 이행 확인 필요

③ 인가권자 확인사항

보상협의·수용재결·공탁 완료 전
인도 강제 시 국가배상 위험 안내

※ 보상금 지급·공탁 완료 여부는 인가권자와 법무부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① **사업유형**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등)

↓

② **시·군·구 + 정비구역명**

↓

③ **현재 사업단계**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등)

↓

④ **사업시행자와 인가권자**

⑤ **나의 지위** (담당 공무원 / 조합원 / 세입자 / 영업자 등)

↓

⑥ **핵심 쟁점과 처분·총회·공고일**

↓

⑦ **임박한 기한 또는 집행 위험 여부**

↓

절차 점검 + 당사자별 권리 분석 제공

효과: 개정법 자동 확인

설명: 동의율 70% 등 최신 제도 변화를 매번 검색해 반영합니다

효과: 소송·심판 위험 사전 차단

설명: 총회 하자·보상 누락 등 취소 위험을 미리 잡습니다

효과: 문서 초안 즉시 제공

설명: 검토보고서·주민 안내문·보완요청서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 인가·처분·보상·강제집행 결정은 반드시 인가권자와 법무부서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Category 02

환경·안전 행정

③ 환경 민원 판정관 · ④ 폐기물 책임 분류관 · ⑤ 대기·수질 처분 판정관

측정값이 있어도, 절차가 맞아야 처분이 살아남습니다

환경 민원 판정관 — 소음인지, 악취인지, 분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발생원별 기준 분류

공장·공사장·층간소음·교통소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시간 법령 조회

기준 수치는 매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제시합니다

처분 검토안 작성

개선명령·과태료·고발 중 가능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측정값 없이 기준 초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절차가 맞아야 처분도 유효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환경위생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옆 주민이 냄새 민원을
한 달에 열 번 넣었어요.
이 정도면 그냥 과태료 부과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진도 있고 민원도 많은데요.

환경 민원
판정관에게
상황 입력

① 민원 횟수 ≠ 위반 차수 경보

민원 10회 ≠ 법정 처분 기준 차수 ⚠
확정 처분이력 별도 확인 필요

② 악취 기준 분류 안내

악취관리지역 내·외 여부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구분 후 적용 기준 안내

③ 적법한 처분 경로 제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 분석결과
확보 → 개선명령 → 과태료 순서 안내

※ 최종 위반 판단과 처분은 관할기관이 원본 측정자료와 사건 당시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8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① 민원 유형 (소음 / 악취 / 분진 중 선택)

↓

② 발생원 (공장 / 공사장 / 아파트 / 축사 등)

↓

③ 시·군·구 + 발생 일시

↓

④ 용도지역 + 시설 인허가·신고 여부

⑤ 측정결과서 유무 + 측정기관·방법

↓

⑥ 주간·저녁·야간 등 발생 시간대

↓

⑦ 과거 확정 처분 이력

↓

⑧ 원하는 결과물 (판정표 / 처분검토안 / 민원회신)

↓

발생원별 기준 대조 + 처분 검토안 제공

효과: 처분 취소 위험 사전 차단

설명: 민원 횟수·사진만으로 처분했다가 취소되는 오류를 막습니다

효과: 최신 법령 자동 반영

설명: 기준 수치를 매번 현행 원문으로 확인해 소급 적용 오류를 방지합니다

효과: 문서 3종 즉시 제공

설명: 판정표·처분 검토안·민원 회신 초안을 한 번에 만들어 드립니다

⚠ 유독성 분진·화학물질·호흡곤란 등 급성 위험 상황은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

폐기물 책임 분류관 — 이게 누구 쓰레기인지, 누가 치워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법령 기준 자동 분류

생활·사업장·대형·지정폐기물, 법령 원문으로 정확히 구분합니다.

처리 책임 판정

배출자·위탁업체·토지소유자 중 누가 책임인지 가려드립니다.

행정 문서 즉시 작성

판정표·검토보고서·민원 회신·보완요청서 초안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에 업체가 다 책임진다고 써 있어도, 법정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efore

공터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토지 주인한테 치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땅 주인이잖아요.
그냥 계고장 한 장 보내면 되죠?

💬 폐기물 책임 분류관에게 상황 입력 →

After

❶ 토지소유자 자동 책임 금지 경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확정 불가 ⚠️
실제 투기 행위자·위탁 경위·관리 상태 먼저 확인 필요

❷ 조치명령 대상자 판정

사건 당시 법령의 조치명령 우선순위 확인
→ 행위자·배출자·소유자 순서 안내
(2026.3.24. 시행령 개정 반영)

❸ 적법한 처리 절차 안내

자진처리 요구 → 사전통지·의견제출 →
조치명령 → 대집행 순서 및 비용징수 근거 안내

※ 최종 조치명령·대집행 결정은 관할기관이 현장·원자료·당사자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8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① 시·군·구 + 발생·발견 일자

↓

② 발생 장소 (가정 / 상가 / 공장 / 공사장 / 공터 등)

↓

③ 물질 종류·상태·대략적인 양 ↓

↓

④ 배출자·행위자·토지소유자 관계

⑤ 위탁업체 허가 여부·계약 범위 ↓

↓

⑥ 신고·계량·인계 자료 유무 ↓

↓

⑦ 과거 처분 이력 ↓

↓

⑧ 원하는 결과물 (판정표 / 보고서 / 민원회신)

↓

폐기물 분류 + 책임·비용 판정 제공

효과: 최신 개정 자동 반영

수도권 직매립 금지·전지류 13종 분류·
순환자원 확대 등 2025~2026년 변화를

효과: 처분 취소 위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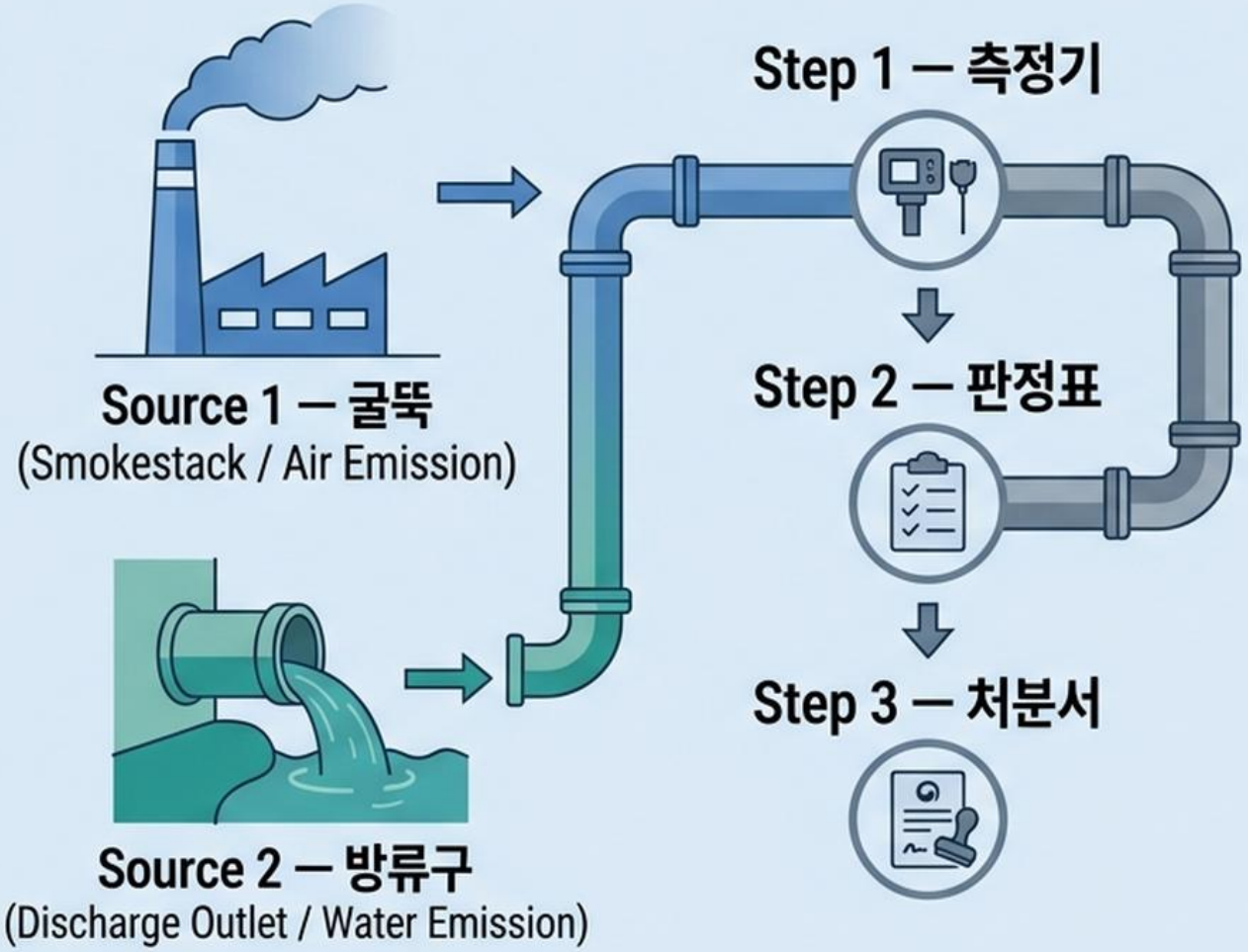
토지소유자 자동 책임·계약서만으로
의무 이전 등 관행적 오류를 사전에 막습니다

효과: 행정 문서 4종 제공

판정표·검토보고서·민원 회신·보완요청서
초안을 신뢰도 등급과 함께 제공합니다

⚠ 폭발성·유독성 물질·의료폐기물·석면 등 위험 물질은 접촉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대기·수질 처분 판정관 — 측정값이 나왔다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측정 유효성 먼저 확인

측정 방법·장비·채취 조건이 맞아야 처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단계별 계산

대기·수질·통합허가 기준을 혼용하지 않고 정확히 대조합니다.

위반 차수·처분 범위 검토

감경·가중·복수 위반까지 처분기준표 원문으로 제시합니다.

"측정기관이 초과라고 했어도, 유효성·차수·절차를 확인해야 처분이 살아남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관리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efore

TMS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찍혔어요.
이거 바로 조업정지
처분하면 되는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이차전지 공장인데
생태독성도 기준 넘었고요.

💬 대기·수질 처분
판정관에게 상황 입력

After

① TMS 24시간 평균 확인 경보

수질 TMS 초과 판단은 3시간→24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변경(2024년 개정) ⚠️
순간값으로 처분 시 취소 위험

② 생태독성 염 예외 절차 안내

이차전지 공장 황산염 배출 → 염 인정 2단계
절차 확인 필요
(2025.3.20.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③ 처분 전 단계 체크리스트

측정 유효성 → 기준 초과 계산 → 위반 차수 →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서 송달 순서 안내

※ 최종 위반 판단과 처분은 관할기관이 원본 측정 자료·허가조건·처분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8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① 대기 / 수질 / 복합 사건 구분
↓
② 시·군·구 + 위반행위일·측정일
↓
③ 업종·공정·배출시설 종류
↓
④ 개별허가 / 신고 / 통합허가 구분

⑤ 측정기관·방식 + 오염물질·측정값·단위
↓
⑥ 원본 측정결과서·채취기록 유무
↓
⑦ 기존 처분·개선명령 이력
↓
⑧ 원하는 결과물 (판정표 / 처분보고서 / 사전통지서)

측정 유효성 → 기준 초과 → 차수 → 처분 범위 단계별 제공

처분 취소 위험 사전 차단

TMS 평균 기준 오적용·생태독성 예외 누락 등 절차 하자를 미리 잡습니다

최신 개정 자동 반영

24시간 평균 전환·생태독성 염 예외·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등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행정 문서 4종 즉시 제공

판정표·처분 검토보고서·사전통지서·민원 회신 초안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드립니다

⚠ 유독물질 누출·취수원 오염·화재·폭발·주민 급성 피해가 발생 중이면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



Category 03

시설·공간 관리

⑥ 공원 허가 가이드 · ⑦ 교통 관할 구분 · ⑧ 주차 행정 가이드 · ⑨ 시설 안전 점검

공간과 시설, 허가·관할·점검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원 허가 가이드 — 공원에 뭔가 설치하려면 먼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 먼저 확인

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
적용 법령이 각각 다릅니다

허가 경로 3가지 구분

공원시설 설치·점용허가·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합법적 대안 함께 제시

허가가 어려우면 위치 변경·이동식 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주민 서명이 많아도, 지역행사라도 — 법령상 허가요건은 별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공원녹지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에 작은 카페 컨테이너 하나 놓고 싶다는데, 주민 200명 서명도 받아왔어요. 점용허가 신청서 받아서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 허가 가이드에게 상황 입력

1 처리 경로 분기 판정

컨테이너 카페 = 공원시설 아님
→ 점용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영리·배타적 이용이면 점응허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2 서명 200명 ≠ 허가요건

주민 서명은 정책 필요성 자료일 뿐,
법령상 허가 요건을 대체하지 않음 안내

3 합법적 대안 3가지 제시

이동식 푸드트럭 허가(조례 확인) / 공원 밖 인근 부지 검토 / 조성계획 변경 후 공원시설 추가 경로 안내

※ 최종 허가·불허 결정은 관할기관이 현장·원본 신청서·공원조성계획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8가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① 공원·녹지 명칭 + 시·군·구

② 신청 행위의 실제 용도·구조·규모

③ 점용 위치·면적·기간

⑤ 굴착·수목 제거·포장 여부

⑥ 최신 공원조성계획 반영 여부

⑦ 다른 법령상 인허가 진행 여부

⑧ 원하는 결과물 (판정표 / 보고서 / 보완요청서 / 허가조건)

법적 지위 → 허가 경로 → 조건·점용료 → 대안 제시

처분 취소 위험 사전 차단

조성계획 변경 없이 점용허가만 발급했다가 취소되는 오류를 막습니다

최신 법령 자동 반영

국가도시공원 신설(2026.8.27. 시행) 등 개정사항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행정 문서 4종 즉시 제공

판정표·검토보고서·보완요청서·허가조건 초안·민원 회신을 함께 드립니다

⚠ 수목 전도·시설 붕괴·화재·감전·진행 중인 무단 굴착이 있으면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

교통 관할 구분 — 같은 도로, 같은 민원도 쟁점마다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결정권자 vs 관리기관 분리

규제를 결정하는 기관과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 혼동하면 민원이 표류합니다

도로 성격 3단 확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 도로법상 노선인지 · 관리구간이 어딘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쟁점별 분리 후 즉시 조치

복합 민원도 쟁점마다 나눠 이송·협의·현장확인 기관을 바로 제시합니다

경찰이냐 지자체냐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쟁점마다 권한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행정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쿨존에 불법주정차가 많고,
신호기 렌즈 하나가 깨졌고,
횡단보도 흰선도 다 지워졌어요.
담당자가 '경찰 소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교통 관할 구분
에이전트에게 상황 입력

❶ 쟁점 3개 × 기관 분리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 지자체
(도로교통법 제161조, 시장 등 부과·징수)
신호기 렌즈 파손 → 지자체·경찰 분장 확인
필요 (유지관리 주체가 지역마다 다름)
횡단보도 마모 → 도로관리청·지자체 복구

❷ "경찰 소관" 오류 차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권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시장 등) — 현장 범칙금(경찰)과
과태료(지자체)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다름 ⚠️

❸ 보호구역 복합 관할 안내

스쿨존 지정(교육장+지자체) / 규제 결정(경찰)
시설 설치·유지(지자체·도로관리청) / 단속(경찰+
지자체 공동) — 한 기관이 전부 담당하지 않음

※ 신호기 소등·도로 붕괴 등 긴급 상황은 관할 판단 전에 112·119 먼저 — 최종 처분은 권한기관이 현행 사무분장을 확인 후 결정합니다

7가지만 알려주세요, 쟁점별로 나눠드립니다

① 시·군·구 + 도로명 또는 교차로명

② 민원 목적 구분
(단속 / 규제 변경 / 시설 복구 / 이의제기 중 선택)

③ 대상 시설·차량·도로 상태

② 민원 목적 구분
(단속 / 규제 변경 / 시설 복구 / 이의제기 중 선택)

④ 도로 성격 확인
(국도 / 지방도 / 시도 / 사유지 / 공동주택 내부)

⑥ 사진·영상·시설 관리번호 유무

⑥ 사진·영상·시설 관리번호 유무

⑦ 원하는 결과물
(표준 판단서 / 간단 판단 / 민원인 안내문)

쟁점별 관할 분리 +
후속조치 기관·방향 즉시 제시

복합 민원 즉시 분리

신호기·노면표시·주정차가
한 민원에 섞여 있어도 쟁점마다
담당기관을 나눠 드립니다

과태료·범칙금 혼동 차단

지자체 과태료 ≠ 경찰 범칙금
— 부과 주체·절차·이의제기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행 법령 실시간 조회

확인된 조문만 인용하고,
불확실하면 추측 없이
확인 경로를 함께 제시합니다

⚠ 신호기 전체 소등·도로 붕괴·음주난폭운전·사고 위험은 관할 판단 전에 반드시 112·119 먼저 신고하세요

주차 행정 가이드 — 건축물대장만 보고 설치대수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재현 가능한 산식 계산

용도별 면적·적용기준·단수처리까지
산식을 공개하며 계산하고 검산합니다

지자체 조례 직접 조회

거주자우선 배정·요금·감면 기준이 지역마다
다름을 전제로 해당 조례를 확인합니다

소급 적용·경과조치 검토

증축·용도변경 시 추가 의무 발생 여부와
경과조치를 기준일별로 구분합니다

공영·민영은 운영주체 구분 / 노상·노외·부설은 법정 유형 구분 — 이 둘을 혼동하면 관할부터 틀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차행정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LEFT

근린생활시설 1층을 헬스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데,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계산하면 주차 2대가 부족해요.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다 인정되나요? 예전에
설치제한지역 지정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CENTER

💬 주차 행정 가이드에게
상황 입력

RIGHT

1 3단계 확인 순서 제시

건축물대장 용도 → 허가도서 용도 → 실제 이용 상태
3가지 대조 먼저
→ / 불일치 시 무단 용도변경 여부 별도 검토 필요

2 기계식 주차장 산입 경고

기계식 주차장 법정 산입 대수 = 안전도인증 받은 대수
(주차장법 제19조의6)
⚠ 단순 2단식은 시설별 1대만 인정
(수원시 조례 별표 별도 확인 필수)

3 설치제한지역·특례 경로 안내

설치제한지역 해당 시 → 설치의무 면제 요건·비용납부
대체절차 확인 필요 / 특례는 자동 적용 아님
— 관할 행정청 승인 별도 필요

※ 최종 설치대수 확정·용도변경 인허가는 관할 행정청이 현장·원본 도서·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10가지 유형 중 골라주세요, 조례까지 직접 조회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계산	2 증축·용도변경 추가의무	3 설치제한·면제·인근설치 특례	4 기계식주차장 행정사항	5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취소
6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7 전용구획(장애인·전기차·경형)	8 주차 위반·견인 견인·과태료	9 공동주택·사유지 주차분쟁	10 민원 회신문·검토보고서

↓ 유형 선택 후 추가 정보 입력

❶ 시·도 + 시·군·구 ❷ 주차장 법정 유형 ❸ 건축물 용도·면적 ❹ 기준일 ❺ 원하는 결과물(검토서 / 계산표 / 민원 회신)

↓

법령·조례 직접 조회 → 산식 계산 → 특례·경과조치 검토

계산 오류 사전 차단

단수처리(0.5 이상 올림)·합산방식·기계식 산입 여부까지 재현 가능한 산식으로 검산합니다

지자체 조례 자동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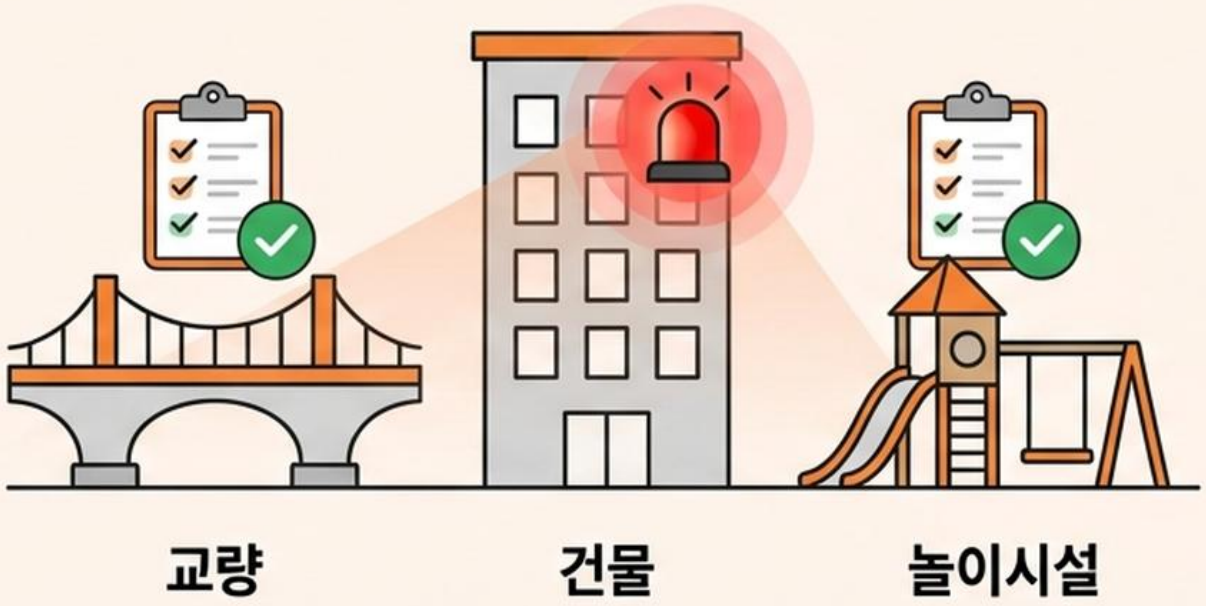
거주자우선 배정·요금·감면·취소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공고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위탁기관 권한 오해 차단

위탁기관의 계약상 업무 ≠ 과태료 부과·강제견인 등 행정처분 권한 — 혼동을 막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 고팁·끼임·추락 위험 시 임의 조작 금지 — 즉시 119 신고 후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세요

시설 안전 점검 — 누락된 점검 하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미리 차단합니다



의무 매트릭스 자동 생성

시설 종별·안전등급·준공연도별 점검·진단·보수 의무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누락·지연·미조치 탐지

대장과 결과서를 대조해 기한 초과·장기 미조치·반복 지적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행정 문서 4종 즉시 작성

종합 검토서·빠른 확인·복수 시설 대조표·내부 보고서 초안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드립니다

보고서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등록·통보·보수·재점검까지 각각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시설관리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LEFT SECTION

준공 35년 된 육교인데,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했고 C등급 받았어요.
작년에 보수공사도 했고요.
이 정도면 관리 다 된 거 아닌가요?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만 받는 거나요?



CENTER SECTION

💬 시설 안전 점검
에이전트에게 상황 입력

RIGHT SECTION

1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장 경보

준공 후 30년 경과 + C등급 이하 제2·3종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3항, 2025.12.2. 시행)
⚠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 불가

2 완료 상태 5단계 분리 확인

보수공사 완료 ≠ 전체 조치 완료
— 보수 후 재점검 완료·시스템 등록·관계기관 통보
·위험 해소 확인 각각 별도 확인 필요

3 보수·보강 기한 단축 안내

2026.12.4. 시행령 시행 후
→ 조치 착수 기한 2년→1년, 완료 기한 3년→2년 단축
⚠ 현재 진행 중인 보수 계획 재검토 필요

※ 균열 급증·구조부 탈락·침하 등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접근 통제 후 119 신고 — 최종 판단은 관할기관과 유자격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10가지만 알려주세요, 누락부터 사고 경로까지 찾아드립니다

① 시설명·위치·용도·규모

②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③ 소유자·관리주체·실제 관리부서

④ 시설 종별·지정 여부·최근 안전등급

⑤ 최근 점검·진단 종류와 실시일

⑥ 현재 위험징후 (균열·침하·누수·화재·가스 등)

⑦ 직전 결과서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기한

⑧ 보수·보강·사용제한·재점검 현황

⑨ 판단 기준일

⑩ 원하는 결과물
(빠른 확인 / 종합 검토 / 복수 시설 대조 / 내부 보고서)

의무 매트릭스 → 누락 탐지 → 사고 경로 분석 → 차단조치 제시

관리 공백 사전 차단

시설물안전법 비대상이라도
개별법 점검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법체계를 동시에 탐색합니다

최신 개정 자동 반영

준공 30년 경과 제2·3종 정밀안전진단
확대(2025.12.2.)·보수기한 단축(2026.12.4.)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중대재해 연결고리 차단

점검 누락→미조치→사고→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단계별로 분석해
차단조치를 제시합니다

⚠ 붕괴·화재·가스누출 등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자료 입력 전에 즉시 대피·접근 통제 후 119 신고하세요



Category 04

민생·경제 지원

⑩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

공고 수백 개 중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을 찾아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 — 공고 수백 개 중

공고 수백 개 중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을 찾아드립니다



실시간 공고 탐색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조회하고 자격요건을 항목별로 1대1 대조합니다

중복지원 3계층 검토

참여·수혜·비용 중복을 단계별로 구분해
부정수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행정 문서 즉시 작성

자격 대조표·중복 검토표·검토의견 초안을
신청자·담당 공무원 모두가 바로 쓸 수 있게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만으로 전체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개별 공고 기준을 직접 대조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상공인지원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LEFT



CENTER

💬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에게 상황 입력

RIGHT

1 법률상 소상공인 → 개별 공고 자격 2단계 분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충족 여부 먼저 확인
→ 경영안정 바우처·강한소상공인 각각 개별 공고
신청대상·제외요건 별도 대조 (통합공고만으로 판단 금지)

2 중복 3계층 판정

지자체 지원금 ↔ 경영안정 바우처: 비용 항목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 경영안정 바우처 ↔ 강한소상공인: 동시 선정·수혜 제한 여부 개별 공고 확인 필요 ❓

3 즉시 조치 3가지 제시

① 소상공인24에서 기존 수혜 이력 확인
② 각 사업 개별·정정공고 첨부 지침 확인
③ 불명확한 항목은 시행기관(소진공) 문의문안 작성 제공

※ 자격 적합 판정은 선정 보장이 아닙니다 — 최종 선정·교부·정산은 시행기관이 원본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8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부터 중복 위험까지 찾아드립니다

TOP SECTION

① 개인·법인·공동사업 여부 + 업태·종목

↓

② 소재지 (시·군·구)

↓

③ 개업일 + 매출(기준연도) + 상시근로자 수

↓

④ 영업·휴업·폐업 상태

↓

⑤ 기존 수혜 이력 (사업명·기관·기간·금액)

↓

⑥ 신청하려는 사업명 또는 목적

↓

⑦ 체납·금융제한·참여제한 여부

↓

⑧ 원하는 결과물
(자격 검토 / 사업 추천 / 중복 점검 / 담당자 검토의견)

↓

공고 실시간 탐색 → 자격 대조 → 중복 판정 → 문서 작성

BOTTOM

공고 누락 방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기업마당·소상공인24)
+ 지자체 개별공고까지 실시간 탐색합니다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명이 달라도 비용·증빙·자산이 겹치면
— 3계층 구분으로 미리 잡아냅니다

담당자 문서 즉시 제공

자격 대조표·중복 검토표·
보완요구서·검토의견 초안을 판정
기호(✅🔶❓⚠️❌)와 함께 바로 드립니다

⚠️ 허위 신청·이중정산·명의대여 등 부정수급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의심 정황 발견 시 원본 기록 보존 후 시행기관·감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I가 검토하고, 사람이 결정합니다.

엑스몬스터 AI 에이전트는 공직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을 찾고, 절차를 점검하고, 초안을 만드는 일을 맡아
담당자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직자의 시간을 아끼고, 처분의 신뢰를 지킵니다"

주식회사 스캐터엑스 ScatterX

대표이사 강명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0층 (대치동, 디아이타워)
Tel 070-4258-5655
E-mail account@scatterx.io